

##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 최종 권고

CRC/C/OPAC/KOR/CO/1

27 June 2008

---

1. 위원회는 2008년 5월 23일에 열린 제1322회 회의(CRC/C/SR 1322)에서 대한민국의 최초 이행 보고서(CRC/C/OPSC/KOR/1)를 심의 했으며, 2008년 6월 6일에 열린 제1342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 A. 서 문

2.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보장된 권리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적용 되는 입법상, 행정상 및 다른 조치들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한 당사국의 서면 답변서와 최초 이행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단이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몇몇 정보가 부족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 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가 2003년 1월 15일에 채택된 당사국의 제2차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CRC/C/15/Add.197)와 2008년 6월 6일에 채택된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최초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CRC/C/OPSC/KOR/CO/1)와 함께 해석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 B. 긍정적인 측면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감사한다.
  - a) 대한민국 군대의 지원 입대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라는, 선택의정서 비준 시 당

---

### 사국의 선언

- b) 현역병 지원 입대 연령을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병역법 제14조 1항의 개정(2004년 12월)
  - c) 18세 미만의 아동을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한 공군 규정의 개정
  - d) 2006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립
5.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조약 및 의정서에 대해 비준 및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 a) 2004년 9월 아동매매, 성매매 및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 b) 2006년 10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 c) 2002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약
6. 더 나아가, 위원회는 무력분쟁에 참여한 아동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국제협력 분야에서 보여준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 I. 일반이행조치

### 홍보 및 교육

7.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교과과정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증진을 위해 실시해 온 다양한 노력들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내용이 평화유지군 파병 전 교육과 군사 학교 교과 과정 등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홍보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8. 6조 2항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디어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군인, 평화유지 인력뿐 아니라 공무원 및 일반 대중에게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를 군사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9.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보건 인력, 사회복지사, 교사, 변호사, 판사 및 출입국관리 담당 공무원과 같이 무력분쟁 지역으로부터 온 망명 및 난민 아동을 접하는 직업을 포

---

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 집단을 위해 선택의정서 조항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 제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관

1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8년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를 포함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할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선택의정서 이행의 감시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 전담 부서가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1.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2차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의 권고의견(CRC/C/15/Add.197, para. 18)을 다시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적절히 감시·증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아동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인식 제고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 권리 부서의 신설에 필요한 인적 및 재정 지원을 당사국이 계속해서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 II. 금지 및 관련 문제들

### 법률

12. 위원회는 2004년 12월 병역법 제14조 1항의 개정을 통해, 지원입대 가능 연령을 기존의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점을 우려한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사항을 권고한다.
  - a)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하여 선택의정서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법에 의해 금지한다.
  -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한다.

- 
- c)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다른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 정신 및 조항과 일치하도록 보장한다.

### 사법권

14.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15세 미만 아동의 군대 혹은 무장 단체로의 징집에 관한 치외법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
15. 아동의 군대 혹은 무장단체로의 징집과 적대행위에 있어 아동의 이용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양자 혹은 다자 협정을 통해 적대 행위에 아동을 참여 시키고 징집하는 범죄에 관한 역외관할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다.

## III. 보호, 회복 및 재통합

### 아동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16. 위원회는 북한 아동의 경우 망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당사국의 입장과 지금까지 단독 입국 아동이 당사국에 의해 보고된 선례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적대행위에 징집되었거나 이용되었을지 모르는 망명 및 난민 아동을 확인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 재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결여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분쟁 지역에서 온 망명신청 아동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망명지위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음을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사항을 권고한다.
- a) 해외에서 적대행위에 징집되거나 이용되었을지 모르는 망명 및 난민 아동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체계를 도입한다.
  - b) 망명 및 난민 아동의 상황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선택의정서 6조 3항에 따라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 재통합을 위해 즉각적이고, 문화적 배경을 고

---

려한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한다.

- c) 본국에서 적대행위에 징집되거나 이용되었을지 모르는, 당사국의 사법권 안에 있는 망명 및 난민 아동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 d)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다음 보고서에 포함한다.

18.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대행위에 징집되거나 이용되었을지 모르는 북한 아동의 특별한 취약성을 고려하고, 출신 국가 밖에서 단독 혹은 가족과 분리된 아동의 처우에 관한 일반 논평6호(CRC/GC/2005/6) 와 선택의정서 제6조 3항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특별보호와 지원 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적대행위에 징집되거나 이용되었을지 모르는 북한 아동이 당사국에 보호 요청 시, 이들이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IV. 국제 지원 및 협력

##### 국제 협력

19. 위원회는 당사국이 무력 분쟁에 참여한 아동을 보호 지원하는 다자 및 양자 활동에 재정 지원을 해 온 점을 환영한다.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분쟁지역의 아동 보호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국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특히 분쟁지역의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에 쓰여진 원조 지출의 평가 감시를 위해 KOICA 지원과 관련된 재정 자료를 항목별 분석하는 방안검토를 권고한다.

##### 무기 수출 및 군사 지원

21. 위원회는 소형 무기와 군수품 수출을 감독하는 당사국의 법률 및 프로그램을 환영하는 반면, 18세 미만의 아동이 군대나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 단체의 일원으로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점을 우려한다.

- 
22. 위원회는 현재 혹은 최근의 무력분쟁에 아동의 참여가 의심되는 국가들과의 소형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보고서에 관련 국내법의 개정 사항 및 이들 국가와의 소형·휴대형 무기 거래 중단에 법개정이 미친 영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 V. 후속 조치 및 홍보

23.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권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찰과 추가 행동을 위해 권고사항을 관련 정부부처, 국가 위원회, 국회의원, 국방부 및 지방당국에 전달할 것을 권고한다.
24. 이와 더불어 선택의정서의 제6조 2항에 비추어,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와 이의 이행 및 감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국의 국가 보고서와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를 권고한다.
25. 선택의정서의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협약 제44조에 따라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 권리협약 제3·4차 통합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한다.

(전문번역: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